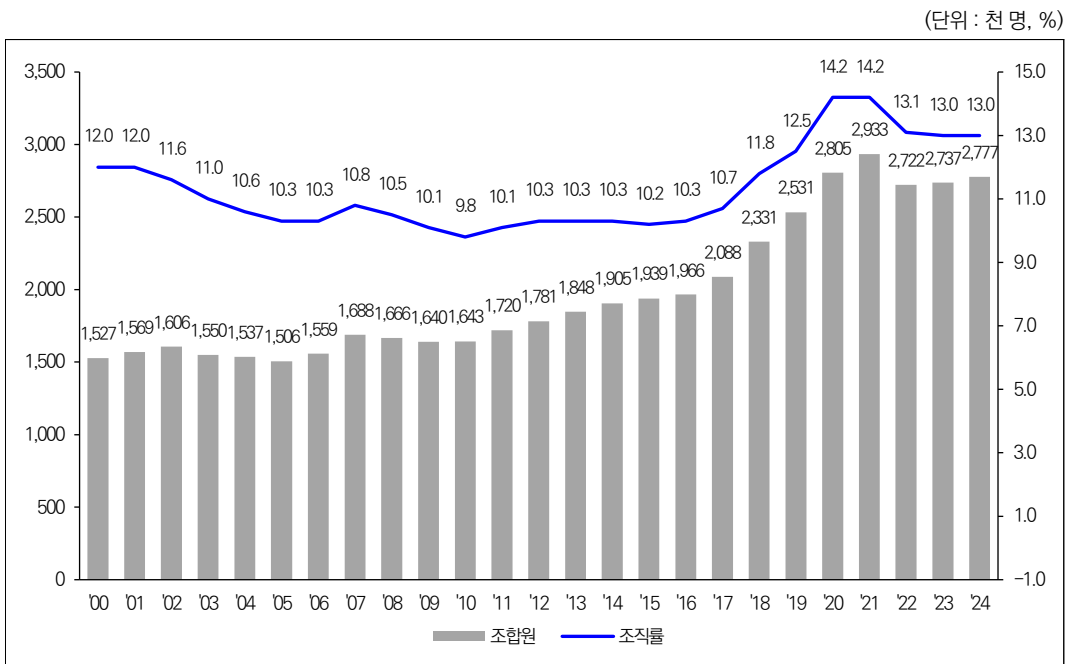


최근 노동조합 조직현황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 2024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원 수는 277만 명이고, 조직률은 13.0%임.
 - 조합원 수는 2021년 293만 명을 넘긴 후 2022년부터 27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음.
 - 노조 조직률은 13.1%(2022), 13.0%(2023)로 2년 연속 하락 후 13.0%(2024년)에서 정체하고 있음.
 - 이는 정부가 양대 노총의 집단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재정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추진해 온 '노사 법치주의' 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노동조합 조합원 수 및 조직률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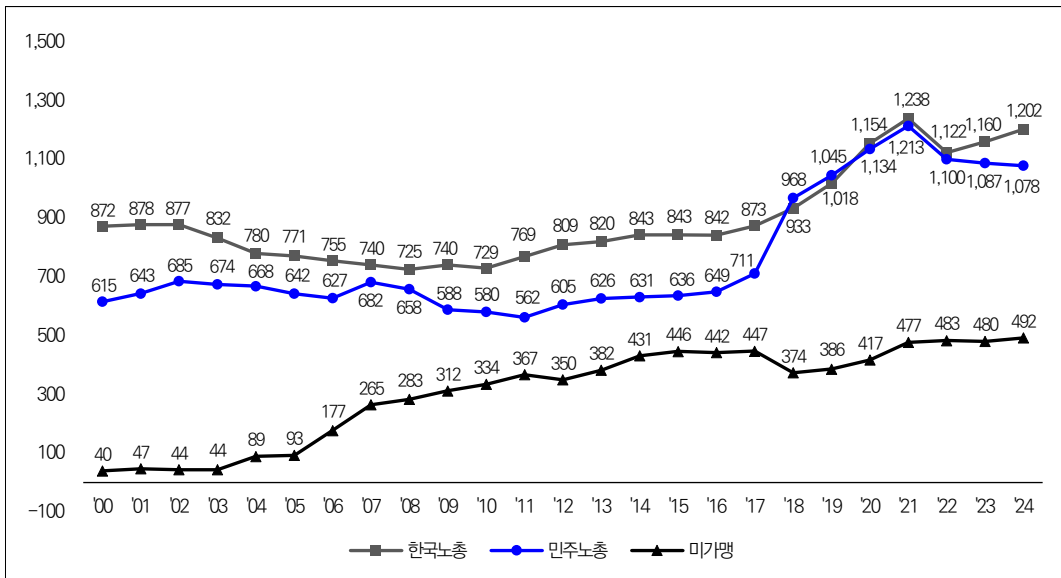
주 : 노동조합 조직률은 고용노동부의 산정방식임.
 조직률=전체 조합원 수÷조직대상 근로자(임금근로자+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X100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의 내용을 재구성함.

○ 총연맹별로는 양대 노총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였으며, 2021년과 비교하여 2024년 양대 노총의 조합원 수는 245만 명에서 228만 명으로 17만 명(6.9%) 감소하였음.

- 총연맹별 조합원 수는 2021년과 비교하면 민주노총이 133,957명(11.0%), 한국노총이 35,489명(2.9%) 줄어드는 등 양대 노총 모두 감소하였음.
- 반면, 상급단체에 가맹하지 않은 미가맹 노조의 조합원 수는 2021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14,686명(3.1%) 증가하였으며, 이는 양대 노총의 조직력 약화와 미가맹 노조의 존재감 확대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당시 정부는 노동 관련 위원회와 공공기구에 ‘화이트칼라 사무직노조’의 참여를 확대하고¹⁾, 회계공시 제도에 기반한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²⁾을 확정하여 회계 투명성을 갖춘 노동단체에 지원금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그림 2]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 추이

(단위 : 천 명)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 1) 윤석열 정부는 MZ노조를 각종 위원회, 간담회, 정책 토론회, 기자회견 등에 초청하거나 참석시키는 방식으로 ‘청년·화이트칼라 중심 노조’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의 장에 참여를 확대하였음(연합뉴스, 2023. 3. 24. 「청년당정대·MZ노조 치맥회동…尹대통령, 즉석 통화서 “노사법치”」).
- 2) 2023년 2월 고용노동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해 노조에 회계장부 비치와 결산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운영상황을 제출하도록 했음. 같은 해 4월 노동부는 양대 노총의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점검하려 했으나 양대 노총의 반발로 조사가 무산됐음. 이후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양대 노총 중심 지원사업을 폐지, 대신 2024년부터는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사업을 신설했음(조선비즈, 2023. 8. 29. 「고용노동부, 노조 지원금 사실상 폐지… 노동개혁 투자」).

- 조직 형태별 조직 현황에 따라 2021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면, 주로 초기업 노조 노조원 수가 감소되었음.
 - 2024년 양대 노총의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1,510,850명이었고, 기업별 노조 조합원 수는 770,121명이었음.
 - 2021년과 비교하면 양대 노총의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130,345명(7.9%)이 감소하였고, 기업별 노조 조합원 수는 39,101명(4.8%) 감소하였음.
 - 양대 노총은 초기업 노조와 기업별 노조 모두에서 조합원 수가 감소했으나, 특히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수 감소폭이 두드러지며, 이는 정부의 노조에 대한 태도 변화³⁾, 대형 사업장 노조의 탈퇴⁴⁾ 등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됨.

〈표 1〉 총연합단체별 · 조직형태별 조직현황

(단위: 명)

| | 2021 | | 2022 | | 2023 | | 2024 | |
|--------------|-----------|-----------|-----------|-----------|-----------|-----------|-----------|-----------|
| | 한국 노총 | 민주 노총 | 한국 노총 | 민주 노총 | 한국 노총 | 민주 노총 | 한국 노총 | 민주 노총 |
| 전체 노조 조합원 수 | 1,237,878 | 1,212,539 | 1,121,819 | 1,099,805 | 1,160,162 | 1,086,618 | 1,202,389 | 1,078,582 |
| 기업별 노조 조합원 수 | 680,533 | 128,689 | 643,091 | 96,387 | 661,199 | 84,706 | 687,892 | 82,229 |
|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 | 557,345 | 1,083,850 | 478,728 | 1,003,418 | 498,963 | 1,001,912 | 514,497 | 996,353 |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 향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안이 시행되면(2026년 3월 10일 시행 예정), 원 · 하청 관계뿐만 아니라 플랫폼 · 특수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노조 설립과 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에 미조직이었던 여러 노동자 집단의 노조 조직화가 확대될 전망이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에 따라,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는 사용자로 인정됨.
 - 과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포함되면 해당 노조 전체가 무효로 간주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프리랜서 · 특수고용 · 플랫폼 등 비정형 고용 종사자들도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행사 기반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⁵⁾

3)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 기조와 태도에서 뚜렷한 대조를 보였음. 문재인 정부는 노조를 사회적 대화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와 불법행위 단속을 강조하며 비판적 · 거리두기 성향의 접근을 취했음(KBS뉴스, 2022. 12. 23.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를 바라보는 방법」).

4) 2023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2023년 6월)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롯데케미칼 대산지회(2023년 6월),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2023년 11월)가 탈퇴하였음.

5) 실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확대 효과는 노동자성 판단, 판례 형성, 행정 해석 등 구체적 집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정부는 각 산업별·업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초기업 교섭이 가능하도록 임금정보 제공, 직무자료 표준화, 모범 사례 확산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LI**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